



지방자치 정책 Brief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 방향

신두섭 지방재정실장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

-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사회의 대응,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 확정
- '적응적 감축'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비전 제시
- 3+1 실행전략 ①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 추진(적용), ② 新유망 저탄소 산업의 생태계 육성(기회), ③ 공정(公正) 전환을 통해 전국민 참여 유도(공정), ④ 탄소중립 인프라 강화(기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도입 현황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업의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탄소중립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가 도입한 상황이며,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 검토 중.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유일
-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기후인지예산서' 작성, '22년도의 경우 2,972개 사업 약 7조 8,154억원(전체예산의 69%)을 대상, 친화사업 14%, 부정영향사업 5%, 잠재영향사업 2%, 중립사업 48% 등으로 편성. 예산서는 사업개요, 기후인지예산사업유형, 소요재원,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 계량적 효과, 비계량적 효과,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
- (대전 대덕구) '22년도부터 '탄소인지예산서' 작성, 183개 사업 약 635억원(전체 예산의 12.3%)을 대상, 감축 1.8%, 배출 8.9%, 혼합 1.5%, 혼합(물품) 0.1% 등으로 편성함. 예산서는 사업개요, 사업유형, 소요예산, 온실가스 감축효과, 감축량 산출근거 등으로 구성

지자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향후 도입 방향

- (향후 도입 방향) ① 담당자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인식 제고 필요, ② 도입 유형의 정확한 구분과 함께 활용도구의 선택 필요, ③ 사업 선정과정에 있어 대상사업의 분류, 대상 사업의 적정성 판단 기준 마련(정량화된 감축량 산정, 사업성격 구분, 주기별 분야별 사업 유형화 등), ④ 시범사업을 통한 지자체의 행정환경에 적절한 규모, 유형, 도구, 시스템 개발 필요

01

급격한 기후변화와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기후변화는 인위적인 산물이며, 적극적인 대응 필요

-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 협정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의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속화됨
- 2020년 1월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 넣은 코로나19 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인 가운데 재확산의 우려 속에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이 확대됨
- 우리나라(2020년)를 포함하여 '19년 EU, '20년 중국, '20년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함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 및 발표하였으며, 국제경제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 3+1 실행전략으로는 ①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적용)하고, ② 新유망 저탄소 산업의 생태계를 육성하며(기회), ③ 공정(公正) 전환을 통해 전국민 참여를 유도하고(공정), ④ 탄소중립 인프라를 강화(기반)할 계획임
- 주요 10대 과제로는 (1) 경제구조 저탄소화를 위한 4대 과제로 ① 에너지 전환 가속화, ②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③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④ 도시국토의 저탄소화 추진함 (2)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과제로 ① 新유망 산업 육성, ②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③ 순환경제 활성화 등 선정 추진함 (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위해 ① 취약산업과 계층 보호, ②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③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을 추진함

02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도입 현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지자체의 도입 현황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업의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임
- 법적 근거로는 '21년 9월 24일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의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명시됨

- 재정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기후대응기금과 함께 탄소인지예산제(Green Budgeting)*가 도입되고 있음(허경선, 2021)
- 우리나라에서는 대전 대덕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강제조항은 아니며, 국가 단위에서 중앙정부가 '23년도부터 전면 도입이 계획되어 있음
- 광역자치단체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2022.03.) 광역단위에서는 경상남도가, 기초 단위에서는 대전 대덕구가 도입함

■ 전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현황 조사 결과 ■

시도	1) 도입 예산명	2) 도입 유무 (O/△/X)	3) 도입 단계(√)				4) 향후 도입 예상시기
			① 사전 검토	② 도입 계획 수립	③ 시범 도입	④ 전면 도입	
서울	기후예산제	△		√			2023년도
부산	미정(담당부서미결정)	X					
대구	미정(담당부서미결정)	X					
인천	미정	X					행안부 지침 이후 고려
광주	미정 (정부 명칭과 동일 예상)	△	√ (분류작업 정도)				2023년도
대전	미정	X					
	탄소인지예산제 (대덕구)	O				√ (2022년도)	
울산	미정	X					
세종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	√ (용역)				2023년도
경기	탄소인지예산제	△	√ (체크리스트작성)				2023년도
강원	미정	X	√				
충북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	√ (용역)				2023년도 (시범운영예정)
충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	√ (내부 구상 중)				2023년 이후 (2023년도까지 도입 준비예정)
전북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	√ (용역)				2023년도
전남	미정	△	√ (조례 정비)				2023년도
경북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예정)	△	√				2023년도
경남	기후인지예산	O			√ (2022년도)		지방재정법 개정 후 도입 검토 예정
제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	√ (용역 예정)				2023년도

* '22년 3월 기준, 필자 조사
** 우리나라는 2023년도 국가예산부터 작성계획, 지자체에서는 아직 강제 조항은 아님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사례

- (경상남도 사례) 사업유형에 따라 기후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으로 구분함
 - 경상남도는 '기후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는데, '22년도의 경우 2,972개 사업 약 7조 8,154억원(전체예산의 69%)을 대상(친화사업 14%, 부정영향사업 5%, 잠재영향사업 2%, 중립사업 48% 등)으로 함
 - 예산서 구성은 사업개요(사업목적, 사업내용), 기후인지예산사업유형(기후친화, 기후 부정영향, 기후 잠재영향사업 등), 소요자원(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계량 및 비계량), 계량적 효과(감축량, tCO2), 비계량적 효과, 종합의견 등임
- (대전 대덕구 사례)
 - 대덕구는 '22년도부터 '탄소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는데, 183개 사업에 약 635억원(전체예산의 12.3%)을 대상으로 감축 1.8%, 배출 8.9%, 혼합 1.5%, 혼합(물품) 0.1% 등으로 편성함
 - 예산서 구성은 사업개요(사업부서,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 사업유형(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 혼합, 혼합(물품) 등), 소요예산(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온실가스 감축효과(감축사업내용, 당해연도 목표, 감축효과, 비계량적효과(정성)), 감축량 산출근거 등임

03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향후 도입 방향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향후 도입 방향

- (인식) 우선 담당자의 탄소배출 여부의 정확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감축방법, 절차, 예산에의 반영 규모 등에 대한 고민이 선결되어야 함
- (유형) 도입 유형은 ① 예산의 기후영향평가, ② 별도의 온실가스 감축예산, ③ 탄소배출목표 예산 등이 있으며(유정민 외, 2021), 지자체마다 이 세가지 유형에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임
- (활용도구) 활용도구로서 널리 쓰이는 탄소인지예산 태깅(Green Budgeting tagging)은 그 절차로, 환경목표의 정의, 태깅 예산범위 결정,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분류 시스템 개발, 환경 영향에 대한 가중치 부여(허경선, 2021) 등이 필요함
- (사업 선정의 애로) 사업선정에 있어, 대상사업을 분류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며,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시범사업) 지자체마다 처해 있는 행정환경이 다양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적절한 규모, 유형, 도구, 시스템 등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참고문헌

경상남도(2022) 기후인지예산서
 고재경(2021) 경기도 탄소인지예산 시범적용 사례와 시사점, 광주전남 정책연구, pp.45-58, 광주전남연구원
 대전광역시 대덕구(2022) 탄소인지예산서
 유정민외(2021)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허경선(202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탄소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 적용방안. 재정포럼, pp.32-5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부(2022) (시·도, 시·군·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참고조례안)

내용문의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033-769-9870, sds@krila.re.kr)

지난호
보기